제 1 장　무역·외국인 투자정책

무역정책과 서기관 박재영

1. 안정적 무역흑자기조의 정착

2003년 수출은 전년대비 19.3% 증가한 1,938.2억불, 수입은 전년대비 17.6% 증가한 1,788.3억불을 달성하여 149.9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2000년 이후 3년만에 수출입 모두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역규모 면에서도 '97년 이후 6년만에 세계 12위를 회복하였고, 무역수지도 '98년 이후 6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흑자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특히,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98%에 달한 것은 소비 및 투자 감소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속에서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의 내용 면에서도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인도,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한해 안정적인 무역흑자 기반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다하였다. 첫째, 관계부처, 업종별 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무역진흥확대회의, 수출유관기관간담회, 지방무역업계간담회의 개최 등을 통해 업종별·지역별 수출애로를 파악·해결하는 총력추진체제를 가동하는 등 수출증대노력을 적극 지원하였다.

둘째, 새로운 수출동력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03년까지 353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발굴하여 기술 및 디자인의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수출상품의 고급화·다양화에 노력하였다. 향후에도 매년 100여개씩 2010년까지 1,000여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발굴하여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주력수출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플랜트의 수출증대를 위해 개도국 유망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한편, 고위급 인사의 현지방문 등을 통해 수주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지식서비스를 수출입 인정범위에 포함시키고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신뢰성보험을 지원하는 등 지식서비스 및 부품·소재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넷째,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하고 사스(SARS)의 발발을 계기로 사이버상담장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보험 인수규모 확대 및 부보율 상향조정, 수출신용보증 지원한도 확대 등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다섯째, 무역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자무역 촉진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자무역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고, 청년무역인력양성(40명), Trade Incubator(23개대학, 1,150명) 등 무역인력양성사업의 추진을 통해 무역인력의 원활

한 공급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한국국제전시장, 광주종합전시장 등 국제규모 전시공간의 적기 건설을 지원하고 품목별 유망전시회 및 지방전시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전시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여섯째, 개방경제에 부응하는 수입제도를 정비해 나가기 위해 한·싱가폴 FTA 원산지협상 및 WTO 통일원산지협상에 참여하는 한편,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유통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도입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물자의 HS 코드화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전략물자 통제체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신통상질서에 부응하는 전략적 국제협력 활동의 강화

2003년의 대외통상환경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되는 가운데 미·이라크전 발발, 북핵문제의 지속 등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 해였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선진국 및 개도국을 불문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하였다. 또한,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의 합의가 실패하면서 다자적인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주춤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본격화하면서 개별적인 자유화를 추진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 힘입어 동북아 경제가 세계경제의 또 다른 한축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인도가 비약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BRICs의 중요한 한 축으로 등장하는 한해이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해 사전적 대응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기술 협력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인 무역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통상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선진 주요국과의 통상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하였다. 미국과는 양자협의 채널뿐만 아니라 WTO, OECD 등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IT, BT, NT, ET 등 첨단 산업의 기술협력을 위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통상사절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유럽과는 한·EU 기본 협정을 근거로 상호 대화를 통한 통상문제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산업협력위 활동에 있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상호 관심있고 실제 교역 투자 활동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는 등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였다. 특히, EU의 확대에 따라 신규가입국에 대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데도 노력하였다. 중국과는 산업협력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점증하는 반덤핑 등 무역마찰을 완화하는 한편, WTO 가입 등으로 세계시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중국시장에 대해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진출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점증하고 있는 양국간 교역불균형 문제의 조기해결에도 노력하였다. 2003년 정부는 세계적인 지역협력 강화 추세에 발맞춰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중점 추진하였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타결(04.2)하였으며,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다. 향후 세계 무역질서의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에 따라 칸쿤 각료

회의를 비롯한 분야별 협상에서 우리 나라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을 통한 심층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정부협상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APEC, OECD 등 국제협력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03년에는 동북아시아 3국간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동북아 3국은 NAFTA,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3국간의 경제발전단계의 차이, 역사적 상흔 같은 경제외적 요인 등으로 실질적인 협력이 미흡한 상태였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3국간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력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산업협력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 및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등 협력채널을 활성화하면서, 전자무역, 에너지, 인증·표준 등 3국간의 분야별 산업협력도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3국간 FTA 같은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도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무역·투자 장벽을 완화시키고 확산되는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활동을 강화하며, 대외 수출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반덤핑 등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산자부,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며, 수입규제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파악하여 통상사절단 파견 등 대응활동을 강화하였다.

3.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2003년도 외국인투자유치는 전세계적 경기침체 및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여 전년에 비하여 투자여건이 호전되었다. 이는 UNCTAD 외국인직접투자통계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2003년도 전세계 외국인투자는 3년만에 증가세로 반전되어 6,596억불로서 전년대비 1.3% 증가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외국인투자도 신고기준으로 65억불, 29%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당초 전망치인 60억불을 상회한 수치이며 도착기준으로는 약 48억불, 31% 증가를 기록하였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부품·소재 분야 투자가 증가하고, 기존 외투기업의 증액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매우 바람직한 변화를 보였다. 2001년중 1만개를 넘은 외국인투자 기업수도 2003년말 현재 1만 4,368개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2003년 한해 동안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도와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첫째, '03.9.2 국무회의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동 대책에는 현금지원제 도입 등 외국인투자인센티브 강화,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 도입으로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Invest KOREA로의 재출범 등의 개선방안이 포함되었다.

둘째,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경영 및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영환경개선계획에는 노동, 세제, 금융·외환, 행정절차 등 4개 분야 49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생활환경개선5개년계획에는 교육, 의료, 주거, 교통, 출입국, 문화 등 6개 분야 102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외국기업인이 자녀 교육문제로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용산지역에 국제 수준의 외국인학교 건립 추진을 개시하였다.

셋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범부처적 투자유치체제를 구축하고 외자유치에 대한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제도로 구체화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각 부처의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각 부처의 투자유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Invest KOREA와의 협조 및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외국인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Invest KOREA에 노사전담반을 설치하여 가동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외 외국인 커뮤니티는 참여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등 對韓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호전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과 함께 2003년에는 대통령과 외국인투자기업 CEO간담회(3.21),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주합동 투자유치단 파견(6.15-6.25), Hub KOREA 행사(9.23-9.26), 한민족 재외동포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국투자환경설명회(10.8),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유치설명회(10.23), 대통령과 외국인투자유치 담당공무원과의 만남(10.30), 외국인 CEO 노사관계 세미나(11.8),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연찬회(11.20-11.21)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펼쳤다.